

노동양극화와 민주주의

I. 머리말 : 문제제기

노동양극화(labor polarization)는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고질적인 문제의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비정규노동이 급증하고 소득격차가 확대되면서 노동양극화는 이제 우리 사회 내부의 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는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로서 자리매김 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 노동양극화는 사회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킴으로써 자살과 이혼 그리고 범죄 등과 같은 사회 해체의 징후들을 날로 확대시키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내수기반을 크게 위축시켜 지속성장의 잠재력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기도 하다.¹⁾

사회경제적 문제들을 확대재생산 시키고 있는 노동양극화의 심각성을 반증하듯 최근에는 학계와 노동계에 의해서 뿐 아니라 재계와 정부에 의해서도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동양극화에 대해 최장집(2005)은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에서 비롯되는 총체적인 노동 위기로 진단하고 있으며, 이병훈(2004)은 우리 노동조합운동의 연대성 위기와 연관 짓는 분석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노동양극화는 참여정부 시절 재정부(2005)와 국책연구소(한국개발연구원, 2006)에 의해 사회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제양극화의 파생문제로서 그리고 삼성경제연구원(2006)에 의해서도 우리 경제의 선순환구조(수출 증대→투자·고용 증대→소비 증가)를 훼손

손시키는 소득양극화의 증대한 문제로서 받아들여지며 그 극복 대안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노동양극화에 대한 문제 진단이 각계에서 다양하게 제시되는 가운데, 그 문제의 심각성과 극복 대책 마련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별 이견이 제기되지 않는 듯하나, 전략적 대응방향과 구체적인 정책수단에 대해 성장-분배 또는 유연화와 형평성/보호를 둘러싼 논란만 분분하였다. 그 결과, 노동양극화의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비롯한 주요 정치·경제영역의 주역들은 이 문제를 제대로 바로잡을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비정규직-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가혹한 고통을 안겨주는 정의롭지 못한 현실이 지속되어 왔다.

노동양극화의 배경 원인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많은 연구를 통해서 세계화·개방경제체제·정보화 등의 거대구조변동들(mega trends), 기업·금융 및 정부부문의 구조개혁과 활동방식 재편 그리고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직적 한계와 경직된 노동시장관행 등이 공통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그 접근 시각에 따라 문제원인 진단과 극복과제 선정에 있어 다양하고 상충되는 입장들이 제시-각축해오고 있다. 그런데, (II장에서 살펴보듯이) 노동양극화가 급격히 악화되는 시점이 1997년 외환위기 직후이라는 점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면, 그 위기 상황을 빌미로 우리 사회에 주입되어온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논리”가 오늘의 노동양극화 문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손쉽게 추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외환위기를 배경으로 정부 관료와 재계 그리고 보수언론에 의해 지배적인 정책담론으로 설파되어온 신자유주의적 개혁논리는 국가경제 및 기업경영의 지배구조에 있어 정부권력의 주도성을 대신하여 시장 규율의 우위를 확립하였을 뿐 아니라 세계화시대에 걸맞은 효율성과 국제경쟁력을 강조하는 21세기형의 성장우선주의를 구현하는 것으로 주장되어 왔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정책담론은 시장외곽의 독점구조, 과도한 단기 효율성 추구의 사회적 파급효과 그리고 경쟁열패자의 양

산과 승자독식 등과 같은 수반되는 문제들을 애써 무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노동양극화로 집약되듯이 “사회정의의 위기(crisis of social justice)”(이병훈 2007a)를 날로 심화시키는 ‘물신주의적 구조개혁’의 현실 동력으로 거침없이 작동해 오고 있다. Rawls(1999)가 지적하듯이 (분배)정의가 사회통합을 위한 제1덕목이라고 한다면, 시장만능주의의 구조개혁논리에 의해 불평등과 차별의 노동양극화가 고착-심화됨으로써 우리 사회의 분단-갈등-해체를 심화시키는 사회구성체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노동양극화와 더불어 날로 악화되는 민생경제의 파탄은 참여정부의 국정실패를 단죄하려는 민심의 엄중한 심판으로 귀결되어 지난해 말 대통령선거에서 ‘경제살리기’의 국정프레임을 내세운 보수정부의 재집권에 결정적으로 이바지하기도 하였으며,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국정철학을 공개적으로 천명한 이명박 정부에 의해 민생구제를 위해 공격적인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에 펼쳐지는 사회·정치현실의 아이러니를 경험하고 있다. 작금의 정치변동은 노동양극화를 통해 국민의 절반 이상이 ‘2등 시민’으로 전락되어 그들의 사회적 시민권(특히 노동과 복지)을 보호-대변해줄 정치적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선거정치에의 무관심²⁾과 허황된 성장신화에의 과잉기대 또는 ‘욕망의 정치심리’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비정규직·영세사업자의 “부서진 미래”(르뽀문학모임 2006)와 “88만원 세대”(우석훈·박권일 2007)의 절규에 아랑곳 않는 현실 정치의 무능과 무책임은 노동양극화의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해결치 못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기반을 형해화시키고 심지어 신권위주의권력으로서의 회귀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지난 1987년 6월 시민항쟁을 통해 쟁취한 민주주의는 두 번의 정권교체를 이룰 만큼 절차적 형식구조를 완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다수의 민생을 보장하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개혁지체의 한계를 드러내며 그 형식과 실질의 탈구(disarticulation)하는 위기적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노동양극화로 집약되는 민주주의의 위기징후에 대해 논구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과 더불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노동양극화의 문제 실태를 살펴보고, 3장에서는 노동양극화를 촉진-강화하는 주요 배경원인에 대해 민주주의의 위기 징후와 관련지어 검토하기로 한다. 4장의 결론에서는 노동양극화의 문제를 대처-극복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급진적 복원을 실현하려는 전략적 과제를 간추려 제언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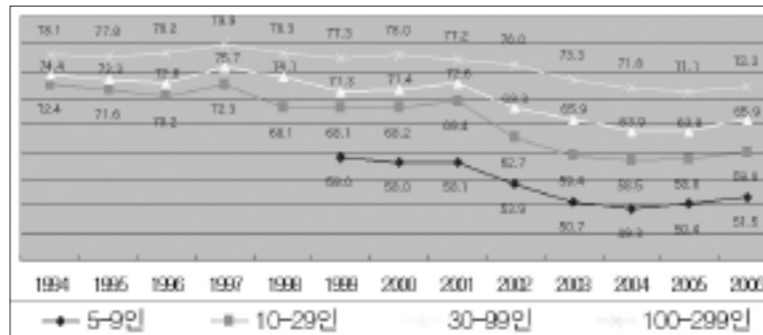
1. 가정해체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혼율의 발생이 1993년의 59.3천 건(1,000 가구당 1.3건)에서 2003년의 167.1천 건(1,000 가구당 3.5건)으로 세배 늘어났다. 최근에는 다소 감소하여 2007년에는 124.6천 건을 기록하였다. 자살율 역시 같은 기간에 1993년의 10만 명 당 10.6명에서 2007년의 24.2명(총 자살건수 11,000명)으로 증가하여 OECD 회원국들 중 불명예스러운 1위를 차지하였다. 또한, 5대 흉악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의 경우에도 1997-2004년 기간 동안 연평균 11.5%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절도는 같은 기간에 21%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이혼·자살·범죄와 같은 사회 해체현상이 급격히 증대되는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나, 그 가운데 노동양극화와 관련된 경제적 불안정과 생활고가 주되게 작용할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다. 참고로, 노동생활의 질을 가늠하는 객관적인 지표로서 근로시간과 산업재해에 있어서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일하고 가장 많이 다치고 죽는 ‘노동중독사회’라는 문제현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바, 2006년 우리나라 실 노동시간이 2,496시간으로 OECD 회원국 평균 1,742시간 보다 40%나 길며 산업재해율(약 9만 명, 재해율 0.72%)이 EU(0.37%)나 일본(0.26%)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높고, 중대사고 사망율(2,406명, 하루 평균 6명) 역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2. 17대 대선 투표율 63.0%와 18대 총선 투표율 46.2%로 역대 선거 중에서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II. 노동양극화의 문제 실태

노동양극화는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을 포괄하는 노동체제 전반에 있어 고용형태·기업규모·성별의 3중 분단선(fracture line)이 중첩적으로 작용하며 분절적인 고용조건(segmented employment conditions)을 통해 발현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특히 지난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정규직 남성 노동자와 여타 잔여 노동자집단간에 임금 및 복지처우, 직업훈련, 고용조건 그리고 법적·조직적 보호 등에서의 분절선이 고착·심화되어 왔다. 우선, <그림 1>에서 예시하듯이 1994~2006년의 기간 동안에 500인 이상 규모의 대기업(=100)과 비교하여 100~299인 기업은 78.1에서 72.3으로, 30~99인 기업은 74.4에서 65.9로, 10~29인 기업은 72.4에서 59.8로, 그리고 5~9인 규모의 영세사업장에서는 1999~2006년의 기간에 59.0에서 51.5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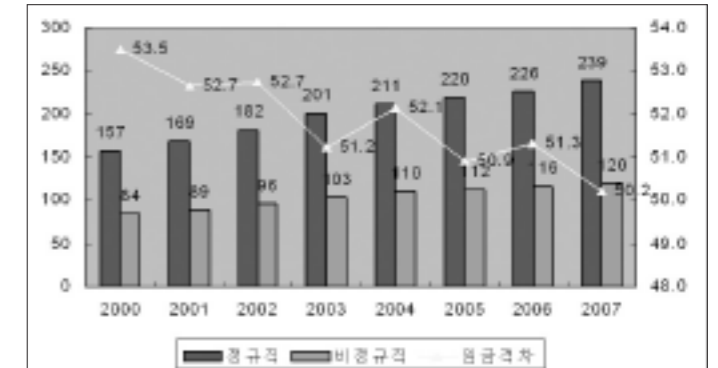
<그림 1> 사업체 규모별 임금격차 추이(월 임금총액 기준, 500인 이상=100)



*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2007)

전반적으로 그 격차가 확대되었다. 특히 그 임금격차의 폭이 영세사업장으로 갈수록 더욱 커지는 것을 확인케 된다. <그림 2>에서 보여주듯이,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자료를 통해 정규-비정규직간의 임금격차가 2000~2006년의 기간에 53.7%에서 51.3%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그 결과, <표 1>에서는 사업체 규모와 고용형태를 교차-종합하여 300인 이상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을 100으로 기준 삼을 경우 사업체의 고용규모가 작을수록 그리고 비정규직 고용형태일수록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그림 2>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추이(단위 : 만원, %)



* 출처 : 김유선(2007b)

<표 1> 사업체 규모 및 고용형태별 월임금총액(2006년 8월 현재)

	금액(만원)			격차(300인 이상 정규직=100)		
	정규직	비정규직	피용자	정규직	비정규직	피용자
1~4인	165	94	103	59.4	33.6	36.9
5~9인	186	110	132	66.7	39.5	47.6
10~29인	208	122	160	74.8	43.8	57.5
30~99인	227	130	188	81.6	46.9	67.5
100~299인	229	147	202	82.4	52.9	72.6
300인 이상	278	189	260	100.0	67.9	93.5
전체 평균	226	116	166	81.3	41.7	59.5

* 출처 : 민주노총(2007)

또한,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간의 고용구조 양극화 추세는 복지 및 교육훈련에 대한 지출 규모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표 2>에서는 1998년과 2005년 기업규모별 노동자 1인당 비법정 사내 복지와 교육훈련을 위해 지출되는 노동비용을 비교하고 있는 바, 1,000인 이상의 대기업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사업체 규모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1998~2005년의 기간에 전반적으로 그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 3>에서 예시하듯이 30~99인 규모의 중소기업에 비해 1,000인 이상의 대기업이 지출하는 노동비용 및 현금급여와 비현금급여의 총액이 99.4%~127.8% 수준에서 177%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기도 하였다. 정규직-비정규직간의 복지격차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법정복지 및 근로기준의 적용수준을 살펴보면, 2001~2007년의 기간에 비정규직의 경우 법정 수혜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그리고 상대적으로 개선-확대된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여전히 적게는 64.2%, 많게는 84.5%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사회보험과 법정 근로기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지속되고 있다.

〈표 2〉 기업규모별 노동자 1인당 사내복지와 교육훈련 비용 추이(단위: 천원, %)

기업 규모	1998년				2005년			
	사내복지		교육훈련		사내복지		교육훈련	
	금액	상대비율	금액	상대비율	금액	상대비율	금액	상대비율
10~29인	NA	NA	NA	NA	135	48.6	4	5.9
30~99인	80.7	50.8	5	13.8	141	50.8	8	12.0
100~299인	87.4	55.0	6.2	17.1	132	47.3	10	14.3
300~499인	106.1	66.7	12.8	35.4	155	55.6	25	35.7
500~999인	108.6	68.3	15.8	43.6	159	57.0	28	40.4
1000인 이상	159	100	36.2	100	278	100	69	100

*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2007)

〈표 3〉 기업규모 간 노동자 1인당 노동비용 격차 추이 : 1986~2006(단위: %)

	노동비용 총액	현금급여 총액	현금급여 이외의 비용 총액			
			합계	퇴직금 등	법정복리비	법정의 복리비
1986	103.7	99.4	127.8	113.0	67.4	163.6
1991	120.8	125.3	107.7	84.3	75.2	160.0
1996	157.4	153.4	173.0	153.4	137.2	172.5
2001	178.1	164.9	214.4	233.0	180.7	202.3
2006	177.3	177.3	177.0	146.9	171.9	185.2

* 주 : 30~99인 규모의 기업 대비 1,000인 규모의 기업 상대적 비율

* 출처 : 노동부, 『기업체 노동비용조사』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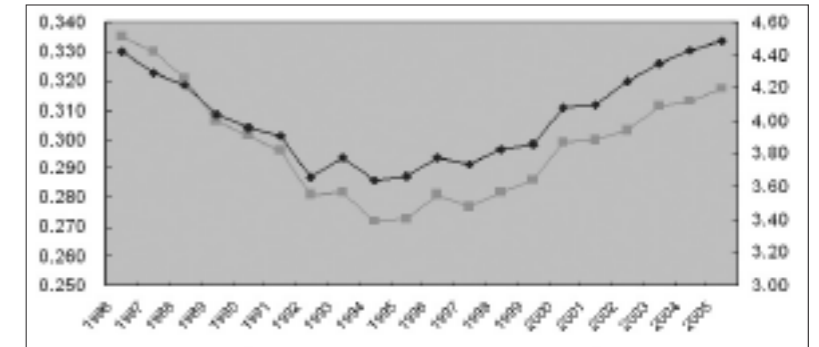
〈표 4〉 고용형태별 사회보험-근로기준 수혜비율 추이(단위:%)

	2001년		2007년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국민연금	92.7	19.3	98.8	33.9
건강보험	94.8	22.2	99.3	35.8
고용보험	80.0	20.7	83.8	33.3
퇴직금	94.3	13.6	99.2	21.8
시간외수당	75.8	9.7	78.4	15.5
상여금	93.1	14.0	97.9	22.0

* 출처 : 김유선(2007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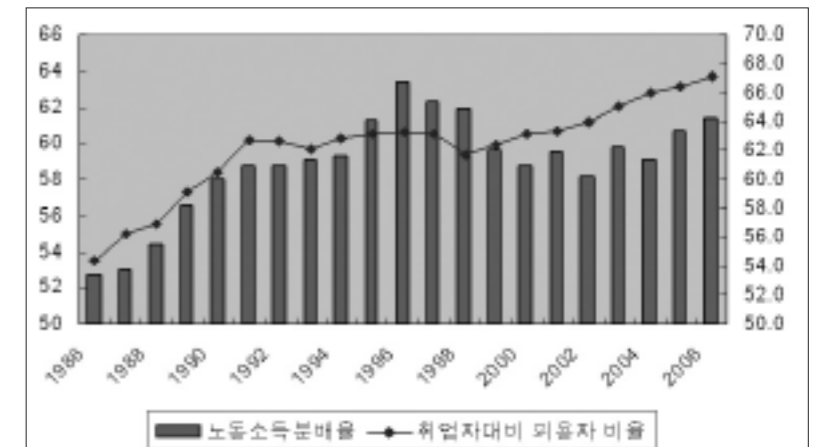
노동보상의 격차가 갈수록 확대됨에 따라 노동시장의 소득불평등 역시 1990년대 중반을 전후하여 그 감소추이가 반전되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3〉에서 보여주듯이, 지니계수의 경우 1994년에 0.272으로 최저점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계속 증가하여 2005년에 0.317로 크게 확대되었다. 또한, 상위 10% 대비 하위 10%의 임금소득배율 역시 1994년의 3.74배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다가 2005년의 4.49배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임금소득의 격차가 날로 확대되는 가운데, 〈그림 4〉에서 예시하듯이 전체 취업자 대비 임금노동자의 비중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에 잠시 61.7%로 하락하였다가 이후 증가세를 이어가 2006년에는 67.2%로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국민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6년 61.4%로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1996년 63.4%)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3〉 임금소득 불평등 추이



*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2007)

〈그림 4〉 노동소득분배율과 취업자대비 피용자 추이(단위: %)



*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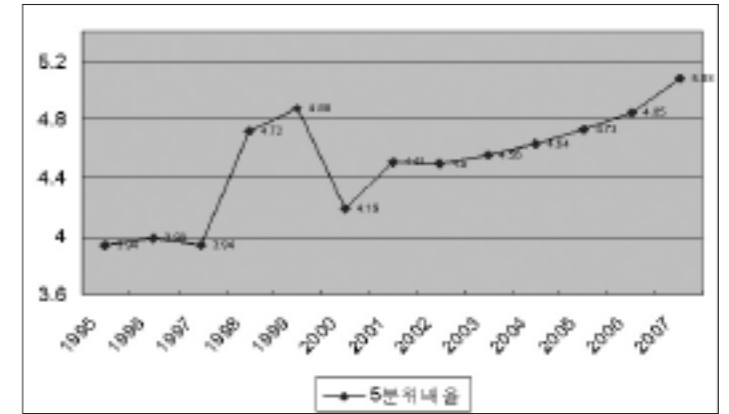
경제위기 이후 우리 노동시장의 고용상황에 있어 제기되는 또 다른 핵심적인 문제로서 고용질의 악화와 특히 고용구조의 양극화를 꼽을 수 있다. 우선, 고용의 질 측면에서 대기업부문의 고용조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decent job)가 크게 감소하였다. <그림 5>에서 보여주듯이 500인 대기업에 소속된 노동자 수가 1993~2005년의 기간에 210.6만 명에서 131.8만 명으로 감소되었으며, 그 비중 역시 전체 사업체 노동자의 17.2%에서 8.7%로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³⁾ 다른 한편으로, 경제위기를 전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의 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이들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문제시되기 시작하였다. <그림 6>에서 예시하듯이 임시·일용직의 비정규 고용규모가 1995년의 41.9%에서 2000년의 52.1%로 증가하여 경제위기 전후의 6년 동안 10.2%가 증가하였다.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널리 확대됨에 따라 2001년부터 정부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부가조사방식으로 비정규직 고용형태의 세부조사를 실시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조사결과를 둘러싸고 노동계와 정부는 (<그림 6>에서 보여주듯이) 상이한 방식으로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해오고 있다. 정부는 부가조사의 비정규 고용 유형에 해당되는 노동자의 수로 비정규직 규모를 추산하는 반면, 노동계는 이에 더하여(비정규 고용형태에 중복되지 않는) 기존의 임시·일용직 노동자를 포함시켜 그 규모를 산출해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김유선 2007a) 노동계의 추산에 따르면 비정규직 규모가 2001~2006년의 기간에 55~56%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정부의 집계방식에 따른 경우에도 같은 기간에 26.9%에서 36.7%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비교되고 있다. 노동계의 추정치는 물론이고 정부 추산의 비정규직 규모 역시 서구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덧붙여, 지난 10년 동안 탈산업화(deindustrialization)와 산업공동화에 의해 안정적인 제조업부문의 일자리가 축소됨에 따라 고용 질의 악화에 일정하게 영향 미치는 것으로 지적할 수 있다. 실제, 1997~2006년의 기간에 제조업부문의 GDP 생산비중이 26.3%에서 27.8%로 증가된 반면, 고용비중이 오히려 21.4%에서 18.0%로 줄어들었다.

이처럼, 양질의 (제조업) 대기업 일자리가 줄어들고, (비정규직-중소사업장의) 나쁜 일자리(bad jobs)가 크게 늘어나는 고용구조의 변동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 경향을 야기하는 주범의 하나로 이해될 수 있는 바, 고용구조의 이러한 변화 추이에 따라 노동소득분배율과 도시가구 소득불평등이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김유선 2005). <그림 6>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1993~2004년의 기간에 중산층의 일자리가 상류층이나 하위 소득층의 일자리에 비해 그 증가세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 소위 “쌍봉형(bi-modal shape)”의 고용구조 양극화가 상당히 이루어지

3. 일본의 경우, 500인 이상 대기업의 고용비중이 1982~2005년의 기간에 26.9%에서 26.5%로 거의 변화가 없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크게 대비된다(정이환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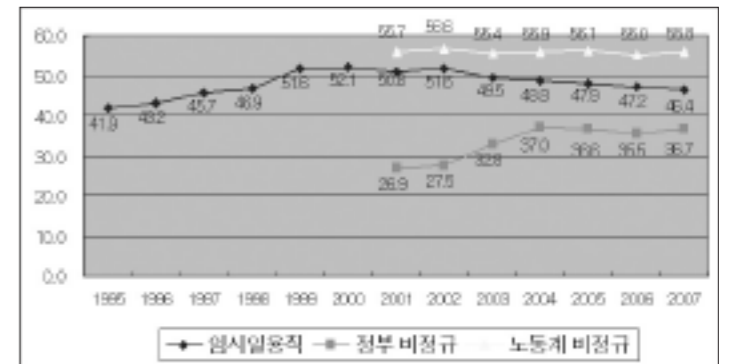
는 것을 확인해볼 수 있다.⁴⁾ 아울러, 임금노동자에 대한 고용의 질에 있어서도 <그림 7>에서 나타나듯이 “쌍봉형”의 분포를 드러냄으로써 노동양극화 실상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⁵⁾ 구체적으로 산업별로 고용의 질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생산자서비스-사회서비스부문에 대체로 좋은 일자리가 밀집되어 있는 가운데, 농림어업-건설업-개인서비스업-유통서비스업의 경우 나쁜 일자리가 집중되어 산업간 고용질의 격차가 현저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기도 하다. 또한, 노동양극화에 내재되는 또 다른 문제로서 일자리이동의 기회가 매우 제한되는 노동시장부문들 간의 폐쇄적인 분단성을 손꼽게

<그림 5> 500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의 규모와 비중 추이(단위 : %)



*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 (2007)

<그림 6> 비정규직의 비중 추이 단위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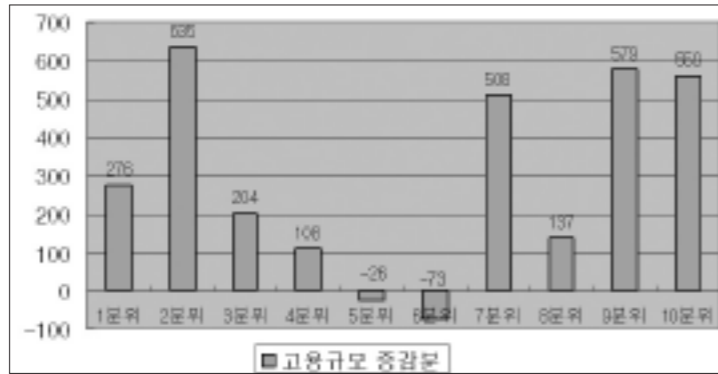
* 출처 : 한국노동연구원(2007), 김유선(2007b)

- 중위소득층에 해당되는 양질의 대기업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한편, 전문직 및 관리직의 고용규모가 꾸준히 늘어나 상위소득층의 일자리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1993~2004년 기간에 전문직 종사자의 수가 241.7만 명에서 405.5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관리직의 경우에도 동기간에 52.3천 명에서 57.6만 명으로 소폭 늘어났다.
- 이병훈(2007b)은 2007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자료의 관련 설문항목 13개(아래 표 참조)를 종합하여 고용 질 지수(Employment Quality Index, EQI)를 산출하여 산업별 분포를 분석하고 있다. 고용 질 지수는 13개 조사항목 중에서 저임금집단에 대해서만 해당 -1점, 미해당 0점을 적용하였고 남은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 1점, 미해당 0점을 적용하여 합계하였던 것으로 최고 12점~최저 -1점으로 분포하게 된다.

범주	세부 구성요소
법정근로기준(4개)	퇴직금지급, 시간외 수당지급, 유급휴가제공, 근로계약 작성
사회보험 가입(3개)	국민연금가입, 건강보험가입, 고용보험가입
고용조건(6개)	정규직여부, 시간당저임금(-), 5년 이상 근속기간, 주5일제시행, 상여금지급, 교육훈련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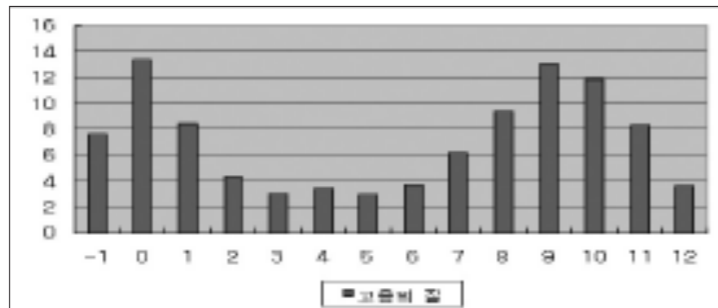
된다. 기존 연구들에서 비정규직과 청년 신규취업자들의 경우 노동시장의 하위 일자리가 보다 좋은 일자리로 이행하는 '징검다리(stepping stone)'로 기능하기보다 한번 빠지면 벗어나기 어려운 '함정(trap)'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⁶⁾

〈그림 7〉 전체 취업자 소득10분위의 일자리 수 증감(1993~2004년, 단위: 천개)



* 출처: 한국개발원(2006)

〈그림 7〉 고용의 질 분포(2007년, 단위: %)



* 출처: 이병훈(2007b)

요컨대, 우리 사회의 노동양극화는 노동자 계층 내에 기업규모·고용지위 및 성별의 분절선에 따라 고용조건 전반에 걸쳐 차별구조가 현저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을 뿐 아니라, 양질의 중위임금 일자리 축소를 통해 저소득 취약노동자집단과 고임금 상위노동자집단이 상대적으로 과밀화되고 가운데 상향 직업이동의 기회 차단에 의해 노동시장의 폐쇄적인 분단성이 고착

6. 비정규직의 일자리 이동에 대한 연구로서는 남재량과 김태기(2000)과 한준·장지연(2000) 그리고 류기철(2001)를, 그리고 청년 신규 취업자에 대한 분석으로는 김준영·전용석(2004)을 참조할 것.

화됨으로써 심각한 사회 불평등의 문제로 비화하고 있는 것이다.

III. 노동양극화의 배경요인들

세계화·개방화·탈산업화의 사회경제적 구조변동을 맞이하여 우리 사회에서 노동양극화를 촉발 시키는 직접적인 주범(主犯)으로 새로운 기업활동방식의 등장을 지목할 수 있다. 1990년대에 점진적으로, 그리고 1997년 말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개방경제체제가 전면적으로 확립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의 경영방식은 초단기적 수익관리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외환위기 직전까지 부채의존적인 투자 확대전략의 값비싼 실패 경험과 주식시장을 매개로 한 해외자본의 영향력 행사 등으로 인해 우리 대기업들이 단기적 수익구조개선을 최우선시하는 '미국식' 경영체제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배규식 2007). 실제, 경제위기 상황을 활용하여 대기업 대부분은 정규인력의 대규모 감축과 비정규직 노동의 대체 활용 및 사업구조의 외주화 등을 통해 상당한 인건비 절감을 도모하는 한편,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내세워 중소 협력업체들을 수직계열화함과 동시에 '수탈' 적인 하도급 계약조건을 강요하여 왔다. 이처럼, 단기 수익관리를 최우선시하는 대기업들의 경영방식이 확고하게 자리잡게 됨에 따라 각 산업의 정상에 위치하는 원청 대기업들은 엄청난 수익실적을 거둔 반면 종속적인 지위에 놓인 하청중소기업들을 빈사상태에 내모는 경제·산업구조의 양극화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기에 이른다.⁷⁾ 다시 말해, 개발연대에 원청 대기업들이 산업 선단(industrial fleet)을 이끌며 수출 성장의 수익 일부를 중소기업 등의 경제부문과 공유해오던 수익환류(trickle-down) 효과가 소실되고, 이제는 이들 원청 대기업이 오로지 자신의 수익성 증대를 위해 하청 중소기업들을 압박하는 수익독식기제(squeeze-up mechanism)가 살벌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외환위기 이후 우리 사회에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및 주변노동부문 간에 경제양극화의 확대재생산구조가 확고히 자리잡게 됨에 따라 대 기업을 중심으로 내부자(insider)와 외부자(outsider)간의 고용분절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물적 토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하겠다.

이처럼 1990년대에 들어, 특히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 중심의 독식체제가 구축됨에도 불구하고 민주화 이후 탄생된 민주정부들은 재벌의 시장권력 비대화와 그로 인한 노동양극화의 확대에 대해 전혀 속수무책이거나, 심지어 신자유주의적 국가경쟁력강화 담론으로 무장하여 그 구조적 문제를 더욱 심

7. 조성재 등(2004)은 자동차산업의 원청형 도급구조를 분석하여 원청 대기업과 하청 중소기업 간의 생산성 차이 뿐 아니라 불공정 거래에 의해 수익성 및 지불능력의 격차를 낳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화시켜 왔다. 이러한 점에서 민주정부들은 우리 사회에 노동양극화를 제어하기 보다는 오히려 촉진시키는 또 다른 공범자로서 기여해왔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문민정부는 스스로 '세계화' 정책의 기획을 통해 경제개방의 무리한 추진과 대기업의 방만한 투자를 촉발시켜 IMF 경제위기를 초래함으로써 노동양극화를 가속화하는 선행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를 배경으로 IMF의 주문에 따라 충실하게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노동시장유연화정책을 전면 추진함으로써 사회 불평등과 노동양극화의 현실 조건을 공고히 하였다. 참여정부의 경우에는 정치개혁과 과거사청산 그리고 지역개발 등의 정치적 개혁의제에 몰입한 채 이전 정부들로부터 크나큰 빛으로 인수받게 된 사회경제적 양극화의 해법찾기를 소홀히 하여 민생파탄의 책임을 독차지하게 되었다.(최장집 2005) 이들 민주정부는 민주화 이후 재벌 대기업 중심의 수익독점 경제체제를 교정-규율할 만한 사회경제적 개혁의지와 정책수단을 갖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오히려 관료적 신자유주의의 성장우선 정책담론에 포획되어 성장-분배 또는 경제효율-사회형평의 선순환을 구현하는 사회민주적 개혁모델을 도의 시함으로써 결국 노동양극화의 확대재생산에 중요한 원인 제공자로 역할하였던 것이다.

한편, 사회구조변동과 자본수취체제 변화 그리고 민주정부들의 정책적 후원에 의해 노동자들 간의 차별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을 저지하여 노동연대성을 보존-강화하는 것은 노동조합운동의 마땅한 책무라 할 수 있겠으나, 날로 확대되는 노동양극화의 현실이 여실히 말해주듯이 신자유주의적 공세에 맞서 노동계급의 연대성을 지켜내기에는 매우 역부족이었다. 오히려 우리 노동조합운동의 내부 주체적인 문제로 인해 노동양극화의 확대재생산을 실질적으로 '방조' 함으로써 스스로 연대성 위기를 직면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따갑게 제기되었다.(이병훈 2004a) 특히, 대공장 노조의 경우- 전투적인 노선을 표방하든, 또는 노사협조주의의 활동기조를 보이든- 하청기업 및 비정규인력의 희생을 전제로 한 소속 대기업의 수익독식경영을 묵인한 채 그 수익의 공유를 위한 담합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기도 하다. 또한, 미조직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사회연대적 노동·복지·산업정책을 이끌어내기 위한 사회적 대화 또는 정책참가가 절박하게 요청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실패한 정책협상경험과 정권차원의 불순한 의도 등을 문제 삼아 장외 투쟁노선을 고집함으로써 사회민주개혁의 여지를 주체적으로 확대해 나가지 못하는 전략적 편협성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인 시민사회운동은 자유민주주의적 정치공간에 적극 개입하여 신사회적 개혁의제에 대한 적잖은 정책/제도개선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그 이면에 날로 심각해지는 노동양극화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의식을 담지하지 못함으로써 사회경제적 구조개혁에는 등한히 하였다. 다시 말해, 시민사회운동은 인권적·정치적 시민권의 확장 그리고 정치·재벌개혁에 치중함으로써 상당한 진전을 이루기도 하였으나, 지난 10년 동안 노동양극화에 따라 다수 국민의 민생기반이 날로 피폐해져온 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둔감하여 시민사회의 분배적 물질 토대를 확충하는

실천을 소홀히 하거나 방기하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반면, 주류 보수언론은 신자유주의 구조개혁 논리의 전도사로서 국가경쟁력 강화 또는 성장우선의 정책담론을 설파하여 개체화된 시장 경쟁의 정당성과 승자 우상화를 대중적인 사고인식에 널리 침투토록 함으로써 노동양극화에 대한 사회공동체적인 개혁해법 찾기를 이념적으로 봉쇄하는 데에 혁혁한(?) 공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처럼, 지난 10여 년 동안 노동양극화가 고착-강화된 배경에는 대기업들의 수익독식체제와 민주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개혁 및 보수언론의 이념적 시장만능 담론화가 상승적으로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더하여 노동운동의 폐쇄적인 실천관행과 시민사회운동의 문제인식 결여에 의해 그 양극화 추세의 저지와 대안적 개혁방향의 모색을 이루는 데에 역부족이었다고 하겠다. 그 결과, 절차적 시민민주주의의 성숙과 달리 국민들의 사회적 시민권을 보장하는 사회개혁적 민주주의는 발달지체(developmental lag)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요약해볼 수 있다.

IV. 맺음말 : 사회개혁적 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위한 진보적 과제

1987년 민주화 이후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는 정치적 대의체제의 공고화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뤄냈으나, 사회적 시민권을 확보-구축하는 사회경제적 개혁에 있어 오히려 퇴행적인 궤적을 보여 왔다. 1987년 6월항쟁을 통해 개발연대의 군부독재를 종식시킨 '386세대' 주도의 민주화운동은 1990년대 이후 시민운동의 활성화와 민주정부 수립 그리고 정권교체를 성사시키며 탈권위적 대의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제도화하는 데에 이바지하였을 뿐 아니라, 1997년 초 노동법개악저지투쟁에서부터 지금의 미국소 수입자유화정책 규탄 촛불집회에 이르기까지 국가권력의 권위주의적 전횡에 항거하는 급진적 시민정치의 민주역량으로 계승-진화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반면, 1990년대의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그리고 특히 1997년 말 외환위기를 경험하면서 민주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신성장정책담론에 의해 시장자율의 헤게모니적 지배력이 사회경제 전반에 침윤되는 가운데 재벌 중심의 수익독식체제와 노조운동의 '달힌' 실천관행이 맞물려 노동양극화에 따른 사회분배의 불평등구조를 확대재생산해왔으며, 심지어 민생경제 파탄에 따른 정치지형의 보수화가 공격적인 신자유주의 개혁논리를 표방하는 신보수정권의 탄생으로 귀결하였다.

2008년 현재, 짧은 6개월여의 기간에 대선과 총선을 통해 보수정권에 대한 국민적 선택이 압도적으로 이뤄짐과 동시에 현 정부의 권위주의적인 통치행태에 대한 시민사회의 급진적 저항세력화가 진행됨으로써 우리 사회 특유의 역동적인 정치격변이 흥미진진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정치지형의 변동은 그 경과와 역동성과 의외성 못지않게 '생계형 보수화와 시민정치의 급진화'로 집약되는 우리

민주주의의 착종된 단면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착종된 민주주의의 현실은 “쇠고기 재협상, MB Out”을 외치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참가하는 촛불집회가 뜨거운 열기로 진행되는 같은 시간대에 기룡전자·이랜드·KTX승무원·코스콤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천일 또는 수백일째 일자리 사수를 위한 생존권 투쟁을 외롭게 지켜나가는 장면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정치현실이 자유민주주의적 개혁단계로부터 사회민주주의적 개혁단계로의 이행과정에서 과도기적인 병목현상(조희연 2008)으로 진보적 민생민주주의(김상곤 2008)로의 발전을 위한 산통으로 사후적으로 기록될지, 아니면 미국식의 ‘노동없는 민주주의’(박상훈 2008)로 귀착될지는 진보-보수 간의 각축실력에 의해 가름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내부 분단을 심화시키는 노동양극화에 의해 날로 확대되는 자유(절차적)민주주의와 사회개혁(실질)민주주의의 간극을 해소하는 것은 진보운동의 시대적 정언명령(impreative)이라 하겠다. 노동양극화를 치유-극복하기 위한 ‘제2의 사회경제적 민주개혁’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진보운동의 급진적인 재정비가 시급히 요구된다. 다시 말해, 작금의 열화 같은 촛불집회에서 보여주듯이 ‘보이는 손(국가)’의 독단에 맞서 절차적 자유민주주의의 공고한 기반에서 표출되는 ‘적극적 시민역량’을 ‘보이지 않는 손(시장)’의 전횡에 따른 사회분배의 실패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진보개혁세력의 대중적 기반으로 전환-진화시키기 위한 진보운동의 새로운 기획과 실천조직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진보운동 주체의 재정립을 위해 조직노동과 시민사회운동의 급진적 변신이 필요한 바, 노조운동은 조합원 이해 대변의 폐쇄적 실천방식에서 벗어나 노동양극화의 분절성을 가시적인 실천으로 파쇄하려는 사회개혁적 운동의 전범을 창출-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며, 시민사회운동의 경우에도 자유민주적 개혁의제에의 경도한 기존의 활동관행을 탈피하여 사회경제적 구조문제에 전력투구하는 운동적 중심 이동이 요망된다. 아울러, 작금의 촛불집회를 통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거대한 국민적 민주역량이 건재하다는 현실 인식을 분명히 하여 조직노동과 시민사회운동 모두 국민과의 소통을 전면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소위 진보적 하방의 실천과 조직화가 못지않게 요구된다. 또한, 사회운동의 과거와 현재를 대표해온 조직노동과 시민사회운동 간에 존재해온 불신 틈새를 메우고, 사회개혁적 민주주의의 발양을 목표로 하는 운동적 지향과 전략전술의 공유를 굳건히 하는 진보적 연대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하겠다. 반신자유주의적 담론에 대한 대안담론을 강구하는 일 역시 시급한 과제인 만큼, 제 진보운동주체의 전략기획역량을 총화-가동할 수 있는 진보적 씽크탱크허브를 공동 연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 요망된다. 신자유주의적 시장논리에 의해 침윤되어온 국민들의 급진적 인식전환을 위해서는 (이번 촛불집회의 시각적 선전-동원방식에 착안하여) 기존의 추상적 구호 수준을 넘어서 국민들의 생생한 체험 기회를 통해 개체화된 시장각축의 모순과 비용을 일깨우고 사회연대적 담론과 생활세계를 수용-내면화하는 성찰 계기를 담보하기 위한 21세기형 실천전략의 강구 역시 요구된다고 하겠다.

참고 문헌

- 김상곤 (2008), “이명박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와 대응전략” (미발표원고)
- 김유선 (2007a), “한국의 노동시장: 진단과 전망”, 한국사회포럼 2007 발표논문.
- _____ (2007b), “2007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노동사회』 제123호, pp. 12-47.
- _____ (2005), 『한국노동자의 임금실태와 임금정책: 민주노총 임금정책방향』, 후마니타스.
- 김준영·전용석. 2004. “청년층의 노동이동과 노동시장성숙에 대한 연구- 초기 노동시장경험이 향후 노동시장 성숙에 미치는 영향.” 제2회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 및 청년패널 심포지엄 발표논문.
- 남재량·김태기 (2000). “비정규직, 가교인가 함정인가?” 『노동경제논집』 제23권 제2호.
- 르뽀문학모임 (2006), 『부서진 미래 : 세계화시대 비정규직 사람들 이야기』, 삶이 보이는 창.
- 박상훈 (2008), “한국은 진보정당 있는 민주주의로 갈 수 있을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 13주년 토론회 토론회문.
- 방하남·이영면·김기현·김한준·이상호 (2007), 『고용의 질 : 거시·기업·개인수준에서의 지표개발 및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 배규식 (2007), 『노동시장과 노동조합』 (한국노총 노동포럼 발제문).
- 우석훈·박권일 (2007), 『88만원 세대』, 레디앙.
- 이병훈 (2007a), “노동양극화와 사회정의”, 『한국사회』 제7집 1호, pp. 145-172.
- _____ (2007b) “노동시장 양극화와 산업별 고용구조”, 2007년 한국사회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
- _____ (2004a), “한국 노동조합운동의 연대성위기”, 『아세아연구』 118호, pp. 65-89.
- _____ (2004b), “한국 노사관계 지형과 노동조합의 사회적 대화 전략” 민주노총 토론회 발제문.
- 이병훈·김유선 (2003), “노동생활 질의 양극화에 관한 연구”, 『경제와 사회』 제60호, pp. 129-149.
- 이원덕 (2003), 『한국의 노동 1987~2002』, 한국노동연구원.
- 전병유·김혜원·신동균 (2006), 『노동시장 양극화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조성재·이병훈·홍장표·임상훈·김용현 (2004), 『자동차산업의 도급구조와 고용관계의 계층성』, 한국노동연구원.

참고 문헌

- 조희연 (2008), “새로운 보수정권 하에서 진보정치세력의 과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창립 13주년 토론회 토론문.
- 최장집 (2005), 『위기의 노동: 한국 민주주의의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 후마니타스.
- 한국노동연구원 (2007), 『2007 KLI 노동통계』.
- 한국노동연구원 (2000), 『경제위기 이후 인적자원관리 및 노사관계 변화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 한준·장지연 (2000), “정규/비정규 전환을 중심으로 본 취업력과 생애과정”, 『노동경제논집』 제23집, pp. 33-53.
- Rawls, John (1999), A Theory of Justice, Boston: Harvard University Press (황경식 옮김, 『정의론』, 이학사)

